

(23) 브렉시트 이후 EU체제의 전망과 정책 시사점

■ 연구책임자

조동희 부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input type="checkbox"/> 정책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구분 선정 사유	본 연구는 브렉시트 이후 EU체제와 EU·英 관계의 구체적 형태를 전망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對EU·英 외교·통상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결정에 따라 향후 EU·英 관계 및 EU체제의 구체적 형태가 미결정 상태에 놓임.

○ 테레사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공식 협상을 2017년 3월 말 이전 시작할 계획임을 밝힘.

*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라 영국은 EU 이사회에 탈퇴의사를 통보해야 하며, 공식적인 EU 탈퇴시점은 탈퇴협상 완료 혹은 통보 후 2년 경과 시점이 될 예정

○ 2년까지 보장된 협상기간, EU 주축국 독일과 프랑스의 2017년 새 행정부 선출 등으로 현재의 불확실성은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

* 佛 대선: 2017년 4월 말~5월 초 예정, 獨 총선: 2017년 가을 예정

○ 탈퇴협상의 쟁점이 될 영국의 EU 단일시장에의 접근과 영국으로의 인적이동 통제에 대해 英정부와 다수 회원국 정부 간 뚜렷한 입장 차이 존재

- 영국 경제·산업계는 단일시장에의 접근 확보를, 메이 총리는 인적이동 통제 강화를 각각 브렉시트 협상의 요점으로 꼽음.

- 반면 프랑수와 올랑드 佛대통령, 장-끌로드 융커 EU집행위원장

등은 인적이동 통제 강화 시 단일시장에의 접근 불가 입장을 밝힘.

□ 브렉시트 찬성의 주된 이유로 꼽힌 이민·난민 문제, 경제통합 이익의 계층간 불균형, EU 차원 의사결정의 정통성(legitimacy)에 대한 의문 등은 다른 회원국들에서도 정치적 포퓰리즘의 형태로 발호 중

○ Arnorsson & Zoega(2016)의 실증분석은 교육수준(-), 소득수준(-), 이민자 비율(+)이 브렉시트 찬성, 이민 반대, EU 역할 확대 반대의 지역간 격차를 잘 설명함.

○ 유로존 위기, 난민사태, 테러 등을 거치며 급부상한 포퓰리즘 정당들은 현재 다수 회원국에서 내각에 참여하고 있고, 독일(AfD), 프랑스(FN), 이태리(M5S) 등 주요국에서도 지지세를 높이고 있음.

- 이들은 공히 국가주권 강화·EU 약화, 반이민·난민을 내세움.

- 헝가리 정부는 EU 난민할당제에 대한 찬반 국민투표를 실시하며 (10월 2일) EU 차원 의사결정의 정당성에 공식적 의문 제기

* 98%의 압도적 반대표에도 불구하고, 투표율(43%) 최소기준치(50%) 미달로 투표결과 무효

□ 회원국들의 이러한 국내정세 변화는 브렉시트 협상 및 이후 EU체제의 구체적 형태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

○ 프랑스(Frexit), 네덜란드(Nexit), 오스트리아(Auxit) 등에서도 포퓰리즘 정당들이 EU 탈퇴를 공론화시키고 있음.

* 이러한 포퓰리즘의 발호가 보호무역 추세(新보호주의)를 야기할 우려도 있으나, 본 연구는 EU체제와 EU·英 관계의 전망에 초점을 두기 위해 新보호주의 자체를 비중 있게 다루지는 않을 것임.

□ 韓·EU FTA 재협상, 韓·英 FTA 등 對EU·英 경제관계 재정립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향후 EU·英 관계 및 EU체제의 구체적 형태에 대한 선제적 연구가 필요함.

-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이후 한국과의 양자무역협정 가능성에 대해 언급함.
- 본 연구에서 EU·英·제3국(美·中·日·ASEAN 등) 간 향후 경제관계도 가늠해봄으로써, 韓·제3국 간 관계 재점검에도 기여할 수 있음.
- 또한 회원국 탈퇴 이후의 지역통합 전개방향을 전망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통합에 관한 시사점도 도출할 수 있음.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① 브렉시트 이후 EU체제와 EU·英 관계가 가질 수 있는 구체적 형태들을 파악하고, 파악된 시나리오별로 ②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고 우리정부의 최적 외교·통상 대응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시나리오별 발생 가능성 평가에 있어서 개별 회원국의 국내정세 및 경제적 이해관계, 잔류 회원국들 사이의 샤플리-슈빅 권력지수 (Shapley & Shubik, 1954) 분포 등을 반영하고자 함.
 - * 샤플리-슈빅 권력지수는 투표를 통한 공동체 의사결정에서 개별 행위자의 영향력을 분석하는 데 사용되는데, 개별 행위자가 행사할 수 있는 투표수가 다른 경우에도 적용 가능함.
- 최적 대응방안 도출을 위해 향후 EU·英·제3국 간 관계도 전망하고자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연구	1 - 과제명: How Brexit affects European Union power distribution - 연구자(연도): Kóczy(2016) - 연구목적: 브렉시트가 EU	- 반자프 권력지수(Banzhaf, 1965; Coleman, 1971) 및 샤플리-슈빅 권력지수 계산	- 권력지수들로 추정된 잔류 회원국간 의사결정 영향력 분포의 브렉시트 전후 비교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회원국간 의사결정 영향력 분포에 미치는 영향 추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On the Causes of Brexit - 연구자(연도): Arnorsson & Zoega(2016) - 연구목적: 英 유권자의 브렉시트 찬성투표에 영향을 미친 사회경제적 요인들 파악 	- 계량분석	- 교육·소득수준, 연령, 이민자애의 노출 정도가 브렉시트 찬성투표 확률에 미친 영향 추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Brexit: the impact on UK trade and living standards - 연구자(연도): Dhingra 외(2016) - 연구목적: 브렉시트가 영국의 교역 및 생활수준에 미칠 영향 예측 	- 구조모형(structural model)을 이용한 예측	- 적절한 무역이론모형 수립 및 계수 추정 - 가능한 브렉시트 시나리오별 교역 및 생활수준 시뮬레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Brexit: A Taxing Decision - 연구자(연도): Kierzenkowski 외(2016) - 연구목적: 브렉시트의 구체적 형태 전망 및 장·단기 경제적 영향 예측 	- 문헌·설문조사 - 계량모형을 이용한 예측	- 브렉시트의 구체적 형태 전망 - 가능한 시나리오별 장·단기 경제적 영향 시뮬레이션
본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브렉시트 이후 EU체제의 전망과 정책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조사 및 제도 분석 - 국내 및 현지 전문가 면담 - 공동체 의사결정에서 개별 행위자의 영향력을 분석하는 이론모형 이용 - 계량경제학적 시뮬레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렉시트 이후 EU체제와 EU-英 관계가 가질 수 있는 구체적 형태 파악 - 개별 회원국의 브렉시트 관련 국내정세 및 경제적 이해관계 분석 - 샤프리-슈빅 권력지수 등을 이용한 잔류 회원국간 영향력 분포 추정 - 발생 가능 시나리오들 사이의 확률분포 추정 - 시나리오별 우리정부의 최적 외교·통상 대응방안 도출

■ 주요 연구내용

□ 브렉시트 이후 EU체제와 EU·英 관계가 가질 수 있는 구체적 형태

과약

- 관련 제도·논의 분석, 현지 전문가 면담 등을 통해 개연성 있는 구체적 시나리오('브렉시트 형태·EU체제 형태'의 조합)들을 파악
- 시나리오별 EU·英·제3국간 관계 전망
- 개별 회원국의 브렉시트 관련 국내정세 및 경제적 이해관계 분석
 - 주요 선거를 앞두고 있는 회원국(獨, 佛 등)의 경우 선거과정에서 관련 논의의 양상 및 여론 관찰, 새 행정부의 입장 파악
- 샤플리-슈빅 권력지수 등을 이용한 잔류 회원국 사이의 영향력 분포 추정
- 잔류 회원국간 영향력 분포와 개별 회원국의 입장 분석에 기반하여, 발생 가능 시나리오들 사이의 확률 분포 추정
- 시나리오별 우리 정부의 최적 외교·통상 대응방안 도출
 - 관련 제도 분석, 전문가 면담, 계량경제학적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최적 대응방안 도출 및 객관적 근거 제시
- 목차 (잠정)

제1장. 서론

- 가. 브렉시트의 발단과 현재까지의 전개
- 나. 우리나라의 對EU·英 외교·통상 관계
- 다. 연구 내용 및 구성
- 라. 선행연구 검토

제2장. 브렉시트 이후 'EU체제 형태×EU·英 관계' 조합의 개연성 있는 시나리오들 파악

가. 시나리오별 개괄

나. 시나리오별 EU 차원 제도의 권한 및 회원국 국내 제도와의 관계

다. 시나리오별 기타 특기사항

제3장. 시나리오별 발생 가능성 평가

가. 개별 회원국의 국내정세 및 경제적 이해관계

나. 잔류 회원국간 영향력 분포 추정

다. 발생 가능성 확률분포 추정

제4장. 시나리오별 최적 외교·통상 대응방안

가. EU·英·제3국간 관계 전망

나. 우리 정부의 최적 외교·통상 대응방안

다. 주요 교역변수들의 계량경제학적 시뮬레이션

제5장. 결론

가. 요약 및 종합적 정책 제안

나. 동아시아 지역통합에의 시사점

▣ 연구추진방법

문헌조사 및 제도 분석

국내 및 현지 전문가 면담

공동체 의사결정에서 개별 행위자의 영향력을 분석하는 이론모형 이용

계량경제학적 시뮬레이션

세부 추진일정

- 연구계획심의회: 2017년 3월
- 연구중간심의회: 2017년 7월
- 연구결과심의회: 2017년 10월
 - * 연구 진행 중 브렉시트 관련 중요 사건 발생 시 ‘오늘의 세계경제’ 등으로 대응 예정
 - 관련 해외 출장: 영국, 프랑스, 벨기에 계획
 - 목적 및 필요성: 주요국의 국내정세와 행정부 입장 파악을 위해 현지 자료 및 전문가 자문 필요
 - 주요활동: 현지조사 및 전문가 면담
 - (국내)전문가 초청 간담회: 3차례 실시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정책수요처(정부, 기관 등)
 -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 기초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1	3	민생경제	35	대외 위험요인에 대한 경제의 안전판 강화
4	13	신뢰외교	132	FTA 네트워크 등 경제협력 역량 강화

■ **기대효과**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향후 ‘EU·英 관계×EU체제’ 조합의 구체적 형태가 미결정 상태에 놓인 상황에서, 해당 조합의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전망해봄

로써 우리 정부의 對EU 및 對英 외교·통상 정책 수립의 길잡이가 됨.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관련 학술 문헌이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에서 나름의 과학적 분석을 시도
- 국제정치학적 주제에 경제학적 방법론을 일부 적용함으로써 새로운 접근법 제시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17.02.01.	종료일	2017.11.30.
------	---------	------	-------	-----	-------------	-----	-------------

■ 연구예산(천원)

구분	내용	금액
합계		58,000
1. 사업인건비	◦ 해당사항 없음	-
2. 공공요금	◦ 우편요금(DM 발송비 포함) 200×10월=2,000 ◦ 통신요금 50×10월=500	2,500
3. 수용비	◦ 소모품 등 구입비 - 전산소모품, 사무용품 및 회의용품비 등 100×10월=1,000 ◦ 인쇄 및 출판비 - 보고서 인쇄비 6×500부=3,000 - 자료 복사비 100×10월=1,000 ◦ 간행물구입비 100×10월=1,000 ◦ 기타 수용비 - 운송료, 신문구독료, 주차료 등 (200×10월)+400=2,400	8,400
4.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시설임차료 - 회의장임차(국내 학술회의) 1,000×1회=1,000 ◦ 장비임차료 - 전산장비(업무용 PC 및 복합기) 리스 100×10월=1,000 - 회의장비임차(국내 학술회의) 500×1회=500	2,500
5. 여비	◦ 국내여비 (100×2인)×5회=1,000 ◦ 국외여비 - 영국(런던) ▪ 항공료(Economy) (2,300×2인)×1회=4,600 ▪ 숙박비(가급지, 2호 가목) [(\$176×4박×1인)×1회]×1.15=810	23,550

■ 연구예산(천원)

구분	내용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식비(가급지, 2호 가목) [(\$111×6일×1인)×1회]×1.15=770 ▪ 숙박비(가급지, 2호 나목) [(\$155×4박×1인)×1회]×1.15=710 ▪ 일·식비(가급지, 2호 나목) [(\$93×6일×1인)×1회]×1.15=640 ▪ 준비금(여행자보험료 등) (60×2인)×1회=120 - 프랑스(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료(Economy) (2,181×2인)×1회=4,360 ▪ 숙박비(가급지, 2호 가목) [(\$176×4박×2인)×1회]×1.15=1,620 ▪ 일·식비(가급지, 2호 가목) [(\$111×6일×2인)×1회]×1.15=1,5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비금(여행자보험료 등) (60×2인)×1회=120 - 벨기에(브뤼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료(Economy) (2,482×2인)×1회=4,960 ▪ 숙박비(나급지, 2호 가목) [(\$137×4박×1인)×1회]×1.15=630 ▪ 일·식비(나급지, 2호 가목) [(\$89×6일×1인)×1회]×1.15=610 ▪ 준비금(여행자보험료 등) (60×2인)×1회=120 ◦ 초청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참석자 교통비(연구심의회 관련) (50×3인)×3회=450 ◦ 시내출장 50×10월=500 	
6. 연구정보활동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자료구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자료구입비 300×10월=3,000 ◦ 특근매식비 (6×20회)×10월=1,200 	4,200
7. 전문가활용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참석 사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연설비(국내 학술회의) (400×1인)×1회=400 - 사회비(국내 학술회의) (300×1인)×1회=300 - 발표비(국내 학술회의) (500×2인)×1회=1,000 - 토론비(국내 학술회의) (200×6인)×1회=1,200 - 발표비(전문가초청간담회) (300×1인)×3회=900 - 토론비(전문가초청간담회) (100×3인)×3회=900 ◦ 연구 및 회의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비(연구심의회) (250×3인)×3회=2,250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정료 500×1회=500 - 검독료 (200×5인)×1회=1,000 	8,450
8. 회의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담회의비 (30×5인)×3회]×10월=4,500 - 연구심의회비 (30×10인)×3회=900 ◦ 학술회의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술회의비(국내 학술회의) (70×30인)×1회=2,100 - 전문가초청간담회의비 (30×10인)×3회=900 	8,400
9.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